

# 135조 투자, 100개 유니콘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 약속

이재명, 선대위 첫 공약 발표

국비 85조·지방비 20조·민간 30조

“성장회복 토대 마련, 경제 도약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향후 연간 30조 부가가치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원을 투자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약 1조원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도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투자 참여 30조원 등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도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도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도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도·기술영도·글로벌 영도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도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의 양대법제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도·기술영도·글로벌영도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도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도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주먹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 함께 만들자”

韓-코스타리카 정상회담

文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 성과 기대”  
알바라도 “코로나 지원 등 협력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에 앞서 “이제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이 2018년 1월 취임한 이후 첫 아시아 지역인 한국에 국빈 방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올해 1월 첫 정상통화, 5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및 7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11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이어 만난 점을 언급한 뒤 “드디어 오늘 서울에서 국빈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대해 “법, 정책, 관행을 성공적으로 개혁하며 올해 OECD 회원국이 됐다. 현재 추진 중인 2050 탈탄소와 국가계획은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각별한 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코스타리카의 한국 전자조달시스템 세계 최초 도입, 한국의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기반 농산물 교역 확대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양국은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함께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해 주신 협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한국이 제공해 주신 지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김종인 ‘합류 보류’에 뼈적대는尹 선대위

김종인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  
윤석열 “김 전 위원장 기다리는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출범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22일)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인선 연기 소식을 직접 알린 후, 둘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만화사거리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묻는 말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며 “그걸 잘 음미하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찾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찾아오면 만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심을 당에 전달했다는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께서 며칠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다”



윤 후보가 23일 서울시장 핵심당직자 회상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아직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보도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처럼 평가하는 기사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 김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는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기는 중도 진영 확보라든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들어오므로써 부딪힐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딱히 반대하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정치적 밀당일 가능성도 있지만, 김병준 전 위원장이 후보에게 직보하는 스타일이고 김 전 대표는 자기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밀고 당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백태홍 기자 pth7285@